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844
----------	------

제출연월일: 2023. 10. 26.

제 출 자: 대구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도래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선정하여 학교폭력 가해,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교육과 상담 업무의 전문성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명: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9항,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3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2항 및 제3항
-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7항
-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의회의 동의)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상담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비지정 기관은 해당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 특별교육기관 운영은 주로 법령에 의해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상담에 관한 것으로 ‘피해학생’의 교육 또는 상담을 진행하는 타 사업과는 구분되어 전문성을 갖춘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 및 상담 운영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

- 조치를 받은 학생의 사안, 학교급, 이수시간을 고려한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교육 중 일일 출결상황, 상담결과 등 특이사항은 학교 담당교사에게 통보
- 학급 복귀 시 추수지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교적응 상황을 모니터링 후 해당기관 또는 관련기관 연결

라. 민간위탁 기간 : 1년(2024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매년 공모를 통한 기관 선정 및 사무위탁 예정,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의회 재동의 추진 예정)

마.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관 선정

바. 소요 예산액 : 320,000천원(26개 기관 차등 지급)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13370, ' 23.10.23.)

- (관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9항,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위탁 가능
- (적정성)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은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 사전 면담을 통해 사안, 학교급, 이수시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 후 추수지도까지 수행하여야 하므로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사업은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게 적정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추진현황(최근 3년)

년도	지정기관	학생교육 이수 인원	학부모교육 이수 인원	지원금(천원)
2021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외 19개 기관	913명	445명	220,001
2022	대구북구청소년회관 외 19개 기관	1,115명	557명	220,000
2023.8월	대구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25개 기관	524명	269명	320,000

나. 관련법규: 붙임 1

다. 2024년 민간위탁사업 추진 계획: 붙임 2

라. 민간위탁 협약서(안): 붙임 3

붙임 1**관련법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7.>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8. 2., 2023. 6. 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2023. 6. 27.>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22. 8. 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사무 내용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붙임 2**민간위탁사무 위탁 추진계획****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민간위탁 추진계획****I 추진배경**

- 전문성을 갖춘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통한 학교폭력 재발 방지
- 민간의 상담 및 특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활용을 통한 가해학생 상담 및 재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도래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 추진
-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실시

II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3항 및 제9항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III 추진현황

년도	지정기관	학생교육 이수 인원	학부모교육 이수 인원	지원금(천원)
2021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외 19개 기관	913명	445명	220,001
2022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외 19개 기관	1,115명	557명	220,000
2023.8월 까지	대구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25개 기관	524명	269명	320,000

IV

민간위탁 추진계획

1. 추진 방향

-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안의 재발방지 및 예방 목적 달성
- 민간위탁공고 후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투명성 유지

2. 위탁 기간: 2024. 3. 1. ~ 2025. 2. 28.(1년 간)

3. 위탁 대상: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26개 기관

4. 위탁 방법

- 수탁기관 공개 모집 추진
-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

5. 위탁 주요사업 내용

- 가해학생의 사안, 학교급, 이수시간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성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에 성인식 교정, 피해자 공감, 친밀한 대인관계 만들기, 재발방지 계획 세우기 등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 포함
- 인성교육, 예절교육,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 미래설계, 가족동행, 체험학습, 자원봉사활동, 금연교육 등
- 교육 중 일일 출결상황, 상담결과 등 특이사항은 학교 담당교사에게 통보
- 학급 복귀 시 추수지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교적응 상황을 모니터링 후 해당기관 또는 관련기관 연결

6. 위탁 소요예산: 320,000천원(26개 기관 운영계획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7. 수탁대상 자격기준

- 대구에 위치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민간기관 등 학생 상담, 교육 등이 가능하며 상담 가능한 상근직원(상담사, 사회복지사)이 필수 배치된 기관

8. 민간위탁기관 선정

가. 민간위탁 공고

- 관련법규: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공고내용: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기관 모집 공고
- 공고방법: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공고기간: 2024. 1. 2.(화) ~ 1. 12.(금)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 1. 8.(월) 9:00 ~ 1. 19.(금) 17:00
- 접수방법: 직접(인편) 및 전자메일(파일) 모두 제출

다. 민간위탁 적격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근거: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 구성계획: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6인 구성

라. 위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

- 1) 서류 심사 기준: 사업목적 및 기관 성격의 적합성, 재무구조 및 인력구조, 사업 실적 프로그램 구성의 합리성, 보조금 집행 계획의 적정성, 추수지도 및 기관 홍보 방안 등 종합적으로 고려
- 2) 현장 심사 내용: 접근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시설 규모 및 수준의 적정성 등 고려
- 3) 2023학년도 지정 기관 중 「2023학년도 운영 실적 평가」 결과 “미흡”(70점미만)에 해당하는 기관은 미지정

V

적정성 검토 결과

- (관계법)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비지정 기관은 조치를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없음
- (전문성) 외부 특별교육기관 운영은 법령에 의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상담에 관한 것으로 ‘피해학생’의 교육 또는 상담을 진행하는 타 사업과는 구분됨
- (연계성) 교육감 지정 기관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력 신장, 재발 방지 및 예방을 달성할 책임이 있으며, 시교육청 사업 담당 부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의 정기적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함
- (적정성)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은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 사전 면담을 통해 사안, 학교급, 이수시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 후 추수지도까지 수행하여야 하므로 특별교육 사업을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게 적정함

VI

향후 추진 일정

	내 용	일 시	비 고
1	민간위탁기관 심사 계획수립	2023년 12월	
2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4년 1월	
3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2024년 1월	
4	위탁 운영계약 체결	2024년 2월	
5	수탁기관 점검	2024년 10~11월	
6	수탁기관 만족도 평가	2025년 1~2월	
7	수탁기관 교부금 정산	2025년 3~5월	

VII

기대효과

-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 및 기관 확보
-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교육지원으로 학교폭력 재발 방지 효과
- 학교폭력예방 및 재발률 감소를 통해 가해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발판 마련
- 학업중단 예방 및 복교 후 생활지도 문제점 해소
-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는 협력적 학교 분위기 조성

붙임 3**민간위탁 협약서(안)**

대구광역시교육감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위·수탁 표준계약서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교육감”이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폭력 가해 및 교권 침해 학생 대상 특별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교육감”이 “수탁자”에 위탁하는 사무는 ‘학교폭력 가해, 교권 침해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학교 부적응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후속조치’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등)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교육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결과를 재계약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복지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조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종사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교육감”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 ② “수탁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교육감”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자”는 “교육감”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탁자”는 “교육감”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감사)** ①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위탁사무의 처리결과, 회계처리, 종사자 근로조건, 민원응대, 시설물 관리 실태,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에 대해 서류제출, 관계자 면담 등 감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등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조치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명령) ① “교육감”은 사무처리, 민원응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사무처리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의 조치가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시정명령 후 20일 이내 이행결과를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이 부당하거나, 해당 사무처리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7일 이내 소명할 수 있고, “교육감”은 그 소명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수탁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회에 한해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고, 2회 이상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정명령과 함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종사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징계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사무처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탁자”에게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중대 민원 및 동일 반복민원 발생 등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중대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
 2.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복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3. 업무편람 등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감”의 승인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등을 이용자에게 부담하여 편취할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6.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수탁자”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책임이 있는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있는 경우
- ② “수탁자”는 “교육감”의 징계요구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과 “수탁자” 는 종사자 징계 시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사자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감” 과 “수탁자” 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 과 “수탁자” 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 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은 위·수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재계약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은 “수탁자” 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명령·종사자 징계 이행여부, 시민만족도, 사무처리와 관련한 언론보도사항, 종사자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재계약 평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른 민간위탁과 관련된 수탁기관 선정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 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 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리 안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교육감” 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 가 책임을 진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 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 의 귀책사유로 “교육감” 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 는 “교육감” 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교육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 등 포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법정 사업주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시정명령 및 종사자 징계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시정명령은 2회 이상)
5.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교육감”이 이 계약과 관련한 사업을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
9.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수탁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 다만,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교육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2. “교육감”이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감”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
-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교육감”과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위탁자” 대구광역시교육감 (직인)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수탁자” ○○○ 대표자 ○○○ (인)
주소